



원전 지역에 대한 이해와 감시기구의 시대적 역할에 대한 고찰

이병일

경희대 학술연구교수



경희대 원자력공학 학사, 석사
경희대 전자공학 박사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원
독일지멘스 초빙연구원
월성원전환경감시센터 소장
경희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원전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이해 관계자들은 원전 지역 인근의 주민들이다. 현재 이들의 불안감과 불만은 그 어느 때보다 팽배해 있다. 원전 지역 주민들이 갖는 욕구의 근원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원자력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지난 5년간 원전 주변의 환경 방사능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전 지역에서 생활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들의 다양한 입장과 정서를 체험하였다. 이 지면을 통해 원전 지역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그 내용들을 공유하여 원전 지역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나아가 원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사회의 과제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서론

2011년 3월 초대형 쓰나미에 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국내 고리 원전 정전 사고 및 은폐 등으로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신이 확대되었다. 게다가 최근 원자력산업계에 불거진 납품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 그리고 일부 부품의 시험성적서 위조 등으로 원자력산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크게 훼손되었다.

한편, 에너지 자원이 매우 부족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일정 기간 원자력에 의한 전력 생산을 피할 수도 없으며, 우리 사회 스스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용후핵연료, 노후 원전 문제, 원전 지역에서의 반원전 정서 등의 과제들을 안고 있다.

아직도 원자력에 대한 극단적인 찬성과 반대를 부르짖는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단편적이고 말초적인 내용들만 발췌하여 과장된 주장을 펼침으로써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나아가 미혹시



고리 원전 1호기를 둘러보고 있는 민간 원자력대책위원들. 우리 사회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일까? 주민들이 지불해야 하는 유·무형의 비용과 그들에게 제공되는 편익과의 구조적 불균형은 원전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불만과 갈등을 갖게 하고, 전문가들을 불신하게 하며 그리고 대도시 주민들과 다르게 원자력을 인식하게 만드는 가장 큰 근본 요인이다.

키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을 해야 하는가 또는 말아야 하는가는 결국 그 사회의 역사, 철학, 경제, 정치, 환경, 문화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 원자력의 수용 여부, 사회적 가치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지엽적이고 이념적인 측면에 치우치거나 오해와 불신이 팽배한 상태에서 결정되어서는 곤란하다.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세계 각국들은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 원전을 유지하거나 또는 폐쇄하는 정책을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향후 일정 기간 원자력을 회피할 수도 없으며, 원자력과 관련하여 당장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현실을 직시하며 주어진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나서, 이를 기초로 마련된 해결 방안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등의 보편적 접근 방법을 통해 우리 사

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돕는 것이다.

원자력 정책 결정의 종착점은 결국 국민들의 수용 여부에 달렸다. 그러므로 정부는 현실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국민들에게 원자력과 관련된 내용들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여 국민들 스스로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이해 관계자들은 원전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이다. 그러나 현재 원전 주변 지역은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원자력으로부터 겪은 부정적 경험과 이로부터 야기된 불신이 고착되어 그들이 인지하는 원자력은 일반 국민들이 인지하는 원자력과 현저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지난 5년 동안 원자력 시설 주변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원전 주변의 환경 방사능을 모니터링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센터 소장으로서 활동하였다. 그러면서 그전에 몸담았던 연구소와 대학에



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다양한 경험을 몸으로 체득하였다.

우리 사회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원자력 관련 과제를 안고 있는 이 시점에, 원자력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첨예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원전 주변 지역의 센터 소장 역할을 통해 배우고 느낀 지역의 현실과 정서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는 분들과 공유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국내 원자력의 출발

국내에서의 원자력은 충분한 검토에 이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정부의 주도하에 거의 일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산업화와 성장 중심의 국가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원자력은, 민주화와 정보화, 그리고 주민 자치 의식 제고에 따른 환경, 복지, 안전 등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는 데에 매우 인색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원자력 정책은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와 간격이 생기기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야기된 불만과 갈등은 점점 고착 상태에 다다랐다. 원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전문가들의 설명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다.

한편 시민·사회·환경 단체들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면서 원자력에 대한 인식은 다양하게 진화하였다. 영광 무늬아 논란은 이런 지역의 정서와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 그 동안 쌓여온 불만과 갈등 등과 맞물리면서 객관적 사실에 의한 판단보다는 과도하게 선정적으로 확대된 사건의 전형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수입 쇠고기와 관련된 광우병 논란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한편, 영광 원전에서 발생한 미량의 방사능 누출 사건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원전 주변의 환경 방사능을 직접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탄생을 촉발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 당시 환경 방사능 분석이라는 감시기구 역할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일정 부분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전 주변 지역의 주민으로 살

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체감하는 불안감은 대도시 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크며 또한 피할 수도 없다. 즉, 원전 주변의 현재 상태 중 하나인 환경 방사능 분석이라는 단편적인 기술적 역할로는 원전 폭발과 방사능 누출 가능성 등에 대한 주민들의 잠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국내 원전에서 대형 사고는 물론 주민들에게 위해가 될 만큼의 심각한 방사능 누출 사고는 없었다. 그러나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들의 불만과 갈등의 수위가 높다는 것은 원전 지역 문제가 기술적인 설명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불신이 탄생시킨 감시기구

감시기구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이 원전의 잦은 정지와 방사능 누출에 따른 위험성을 우려하며 추가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다. 감시기구가 발족한 지 10년이 훌쩍 지났으나 원전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만, 그리고 갈등은 계속되고 있으며 나아가 고착화 되고 있다.

원전 지역에서의 경험으로 볼 때, 원전 주민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원전 주변의 환경 방사능에 대한 분석 결과가 분명 아니다. 그들이 갖는 불안감과 갈등을 포함한 불만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전 시설로 발생하는 이득의 대부분을 대도시가 가져가는 데 반해 그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감과 불만 등의 문제들은 그 지역에만 국한되는 불균형의 구조적 특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주민들 스스로 리스크를 안고 생활하며 겪는 불만과 갈등을 설득력 있게 이 사회에 전달하기도 쉽지 않다. 더욱이 심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을 정량화하여 표현한다는 것도 매우 어렵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원전 반대 시위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거의 전부인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안감, 불만, 그리고 갈등에 대한 근원적 문제 정의 없이 환경 방사능 분석이라는 감시기구의 기술적 행위를 통해 감시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란 쉽지 않다.

이제 감시기구가 진정으로 지역을 위해 활동을 하고 원전 지역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그 역할을 하려면, 이와 같은 지역의 현실을 우리 사회에 전달하여 그들과 공유하고, 특히 원전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감시기구가 지역의 현실을 외부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원전 지역과 원자력 관련 기관은 물론 정부와의 밀접한 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야 한다. 감시센터는 이를 위해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다양한 인사들을 초청하여 지역의 실상을 전달하고, 다방면의 전문가들과의 정기적 교류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 각종 토론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학술적 이론에 근거하여 그들과 나누는 것 또한 매우 절실하다.

최근 불거진 원자력 이슈들

최근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발생한 고리 원전 전원 상실 사고는 절차서만 지켰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관리 측면에서 발생한 문제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업자 측 발표들의 대부분은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분명 그들을 혼란하고 불안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발표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과 적절한 조치,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즉, 기술적인 안전성을 주장하기보다는 분명히 관리적 측면에서 안전성이 일부 훼손되었고, 주민들을 혼란하고 불안하게 하였으며, 성과 위주 사업 추진 방식이 그 사고의 원인이었음을 인정했어야 했다.

방폐장 공기 지연에 따른 안전성 논란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방폐장의 안전성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외국의 유사한 방폐장의 공사 기간을 예로 들어 애초에 경주방폐장의 공사 기간은 무리한 설정이었음을 솔직히 인정한 후, 공기가 그렇게 결정된 배경과 함께 공기 연장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 즉, 주민들은 사건의

인과 관계에 대한 설명이 빠졌거나 애매한 정부의 발표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계속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압력관을 교체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운전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한 것은 지역 주민들을 무시한 것이다. 더욱이 계속운전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은 설게 수명이 끝난 원전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상식적인 도리와는 분명히 거리가 있다.

그 결과 한수원 스스로 업무 추진의 상식과 정당성을 훼손함으로써 향후 업무 추진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장기적으로는 업무 추진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며,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 스스로가 보편적 가치를 저버린 꼴이 된 것이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 그런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찾고 스스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연장선에서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이렇게 지연되고 어렵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고민과 과거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부득이한 오류를 인정함으로써 진정성을 보이고,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 최근의 원전 비리 발생과 무리한 업무 추진으로 저하된 신뢰와 자신감을 회복하고, 상식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과제

향후 일정 기간 원자력을 피할 수 없으며, 사용후핵연료 문제와 같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문제들은 지역 사회, 지자체, 원전 사업자 또는 정부 그 어느 누구의 부분적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서로 간에 오랜 세월을 통해 다르게 형성된 인식과 가치들이 어느 한순간에 합의점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결국 원자력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상호 이해와 합의, 그리고 공감함을 통해 우리 모두의 문



제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공통분모를 찾고, 먼저 상호간에 오해와 불신으로 형성된 부정적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이제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정부 책임자들만이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원자력과 같이 사회 전체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런 단계가 성공적으로 발전하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원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대 변화에 따른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데 부득이한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과거의 업무 추진 방식을 고집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한 자기 성찰로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또 이 과정에서 원전에 대한 비중의 적절성, 원전의 경제성,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한편으로 원전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지난 5년의 경험으로 볼 때, 정부가 향후 원전 시설로 인해 야기되는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원전 지역 주민들의 근본적인 불만을 해소하는 데 소홀하거나, 원전이라는 기피 시설을 안고 살아온 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보편적 가치를 외면한다면, 향후 국가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수원은 국가의 발전과 경제 개발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현재 밝혀졌거나 또는 잠재된 비리 가능성에 대한 자발적인 성찰과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업무 성과 위주의 평가 방식이나 순간의 문제 해결에만 집착함으로써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직된 조직 문화, 수직적인 조직 구조 등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또 최근의 원전 납품 비리와 시험성적서 위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수원이 본연의 업무인 전력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건설, 사업 관리, 구매 등의 분야에 대한 독립 또는 이에 준하는 변화와 원전 사업의 폐쇄성과 정

보의 비대칭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개혁하려는 노력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원전 지역은 현재 깊은 불안감과 상실감이 팽배해 있다. 원전과 관련하여 기술적 또는 비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들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어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들은 느끼고 있다. 이제 이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정리하여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민 사회 단체들은 때때로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과도한 기준에 근거한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와 사업자는 시민 사회 단체들의 합리적 주장과 근거 있는 논리에 대하여 그들을 인정하고 함께 고민하며 정책에 반영하는 생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 관점을 지향하고 활동하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이해 당사자들 간의 논의에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한 후, 서로 간에 합의된 장기적 로드맵과 원칙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해당 지역의 다양한 단체장들의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리더십에 기초하여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작은 일부터 대다수의 주민들이 공감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작은 성과를 통해 얻은 자긍심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큰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그것이 가져올 밝은 미래와 희망을 우리 스스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성공이 제공하는 유·무형의 가치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과정에 참여한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책임감을 갖고 그들의 지역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보람되고 능동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이해 당사자들 간에 사적인 욕심을 부리거나 단기간의 성과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순간, 원전 지역 문제들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칠 수 있다. 오히려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원전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다수의 국민들 간에 합의로 만들어진 원칙과 최소한의 상식적 절차를 꾸준히 지켜나간다면, 그 결과로써 자연스럽게 서로의 권위가 형성되어 그 어떤



월성원전 주변 환경방사는 조사결과 주민 설명회. 원전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안감, 불만, 그리고 갈등에 대한 근원적 문제 정의 없이 환경 방사능 분석이라는 감시기구의 기술적 행위를 통해 감시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란 쉽지 않다. 이제 감시기구가 진정으로 지역을 위해 활동을 하고 원전 지역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그 역할을 하려면, 이와 같은 지역의 현실을 우리 사회에 전달하여 그들과 공유하고, 특히 원전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원전 지역 문제라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원전,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야기되는 불안감, 불만, 갈등 등의 부정적 요소와 사회적 비용들을 우리 사회가 공감하는 상식과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최대한 해결하려는 노력을 끈질기게 실천해야 마땅하다.

고찰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의 감시센터는 원전 주변의 환경 방사능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감시위원회를 통해 원전 주변 주민들에게 전달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탄생하였다.

원자력을 전공한 필자는 감시센터의 법적 역할을 통해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지역의 현실은 너무나 달랐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원전 사업자와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너무 커서 감시센터의 환경 방사능 분석이라는 기

술적 활동만으로는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 주된 배경에는 과거 긴 시간 동안 원자력으로 인한 직·간접의 다양한 불만과 갈등이 확대되고 고착되는 과정이 있었다. 그 결과 감시센터의 역할조차 별 의미를 갖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제 원전 지역에서 전문가들의 기술적 설명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원자력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 환경은 일반 대도시의 국민들과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 감시기구와 인근 대학이 수행한 환경 방사능 분석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에서도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예년에 비해 변화가 거의 없는 방사능 분석 결과에 대한 그들의 반복적인 발표는 자칫 불안감과 불만이 가득한 주민들에게 또 다른 형태로 안전성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환경 방사능 분석 결과를 포함한 전문가들의 설명을 외면하는 지역의 정서, 주민들이 갖는 불만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원전의 안전에 대한 낮은 인지 현실 등을 사실 그대로 정리하여 정부와 원자력 전문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감시기구의 바람직한 역할 중 하나는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생업이 있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그들의 답답한 심경을 외부에 온전히 전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감시기구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시기구 스스로 보편적 가치 추구를 통해 많은 관련 기관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상대를 인정하고, 사실 관계에 따라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받아들이며,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과 전문성 확보로 시민 단체와의 차별화로 스스로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업자와 주민들 간에 상호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이를 통해 감시기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한 뒤라야 비로소 지역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일부 직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방사능 분석이라는 법적 역할 이외에 많은 사람들과 지역 현실을 공유하고자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심포지엄, 워크숍, 세미나,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의 행사를 수행하고자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특히 3개월 동안 여러 번



의 만남과 설득으로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을 초청하여 개최한 토론회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마지막으로 원전 지역에서 생활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역 정서와 바람을 한 번 더 전하고자 한다. 원전과 방폐장이 위치한 동경주(월성원전이 위치한 경주의 동쪽)는 경주시 전체 인구의 약 5%에 불과하다. 아무리 그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시내권이 찬성하면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동경주 주민들이 원자력 관련 이슈가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전 안전성의 이슈보다도 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결정되고, 더욱이 불안감과 불만을 야기하며, 편익의 증가가 거의 없는 이 상황 현실을 몸으로 막아야 하는 눈앞의 물리적 현실이 더 고통스러웠는지 모른다.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판단과 선택은 생존을 위한 것으로서, 극단적인 수밖에 없다. 경주방폐장이 그랬고, 사용후핵연료 문제 또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은 과거의 부정적 역사를 치유하지 않고는, 돌아선 그들의 정서를 회복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제 원전 지역에서의 삶을 바탕으로, 원전 지역 문제 완화를 위해 요구되는 몇 가지 원칙들을 조심스럽게 전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정부의 주도로 장기간 원자력산업 발전이 지속되는 동안 동시에 사회가 변했고, 주민들의 인식이 변했으며, 원자력 규제 환경이 변했다.

월성 원전의 건식 저장고가 임시 저장인지 중간 저장인지 또는 원전 배수구가 환경 방사능 분석을 위한 해수 시료 채취 위치로 적절한지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다.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하나씩 해결하는 성숙함을 스스로 보이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고 또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과거 경제 개발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밀어붙이기식의 원전 정책의 후유증, 원전 지역에서의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 문제, 원자력 마피아라고 지칭되는 일부 세력의 비도덕성 문제, 우리 바로 앞에 놓인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과의 인식 공유가 절실한 때이다.

원자력은 이념이나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 현실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할 객관적이고 합리적 선택의 문제다.

소결

원자력은 고밀도 에너지원으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반면에 높은 에너지 집중도와 방사능 누출 등에 의한 리스크가 존재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중의 안전장치들이 요구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극히 낮은 확률이기도 하나 본질적으로 잠재적 리스크를 피할 수는 없다.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이 원전을 기피하는 이유다.

이런 상반된 원자력의 상반된 특징들은 원자력에 대한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과 대도시 주민들의 인식에서도 극명하게 달리 나타나고 있다. 대도시 주민들은 저렴하고 질 높은 전기를 제공하는 원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반면,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방사능 누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원전을 기피하고 있다.

이렇게 주민들이 지불해야 하는 유·무형의 비용과 그들에게 제공되는 편익과의 구조적 불균형은 원전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불만과 갈등을 갖게 하고, 전문가들을 불신하게 하며 그리고 대도시 주민들과 다르게 원자력을 인식하게 만드는 가장 큰 근본 요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일까? 여기에 명백한 원자력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으며 그 중간자로서의 위치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감시기구의 시대적 역할이 분명 있을 수 있다. ☺